

민주, 김건희특검·日굴욕외교·檢개혁 대대적 공세 예고

민주·정의 특검안 하나씩, 절충 日외교 국조, 청문회도 野 연계 “사개특위 가동해야, 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검찰 개혁 등 향후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 28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쌍특검 관련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란 고위 책무를 방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란 국민 명령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발의안,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발의안을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한 특검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상호 양보를 통해 야권 연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50억 클럽 관련 특검 정의당안은 특검 추천 관련해 비교선단체를 담았는데, 그것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 “김 여사 특검엔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지만, 특검 추천 관련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 주장을 존중해 기다리고 법사위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3월30일에 태우는 게 좋지 않겠나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 연대를 통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이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정의당 입장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문회 관련 상임위를 열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반드시 청문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 아래 준

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대일 외교를 “통 큰 친일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국익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라”는 등 비난을 더했다.

민주당은 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 후속 대응 차원에서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갈 것임도 시사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 헌재 판단 후속 대응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며, 시행령 원상회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한 장관 사퇴와 불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며 “이제 헌재 판단이 나왔으니 그간 공천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당연히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를 간사를 통해 소집 요구하고 개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요 민생 사안을 지적하면서 정책 비판 기지도 높아가는 모습도 부각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질고 “주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혼선, 혼란을 수습하지는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또 저출생 대책을 언급하고 “증여세 면제는 인구 대책이 아닌 부자감세 일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등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나”라고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전형적 반법치를 하는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에 주목하는 건 환영한다”며 “아침밥 시간을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 천원 학식을 실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농

민 생존 보장과 식량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김정호 원내 선임부대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 목표를 보면 후퇴”라고 질고 “실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원내 부대표는 KT 사장 선임 관련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이슬기자

정일영 의원, 취약계층 대상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원

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15%)가 반려동물들

반려동물 양육 가구, 7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진료 수요 상승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 진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당시에 반려동물 여행 절차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온 바 있다.

김재환기자

무안군-국회·전남도, 공조체계 2024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총력

국비 예산 확보 위한 맞춤형 상담 시행

무안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 전남도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중앙부처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고 건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국고 건의 사업에 대한 상담사로서 서삼석 국회의원의원실 황준하 보좌관, 이경윤 보좌관, 전남도청 이선호 국고예산팀장이 참석해 총 34건, 2,788억 원 규모의 국고 건의 사업을 관련 부서장, 팀장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건의 사업은 ▲영산강 느리지

지구 국가하천 친수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 농장 조성사업 ▲지속가능한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사업 ▲창포지구 배수 개선 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등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예산 정책회의를 통해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고 건의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 당위성을 높이는 등 국고 확보에 온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